

불량식품 근절

불량식품 근절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식약처,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위해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5월 8일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였다.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은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처 간 협업 및 세부 추진과제 내용이 담겨 있다.

불량식품 근절위해 부처 간 역량 집중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치와 불량식품 인식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감시 및 정보공유 협업 부재로 인해 중복감시, 위해 중시 감시 등에 대한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사전 예방적 근본원인의 해결이 미흡하고, 동일 형식의 적발위주의 사후 감시, 단속으로 인해 불량식품 발생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정책으로, 주요 추진방향은 생산, 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처 간 소통으로 칸막이 해소 및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관별 정보공유와 환류 체계 활성화로 칸막이를 해소하고, 상시적 감시강화를 통해 불량식품 재발방지와 근본원인 해결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국정과제(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과제), 범정부 공통과제(기획 감시 등 4대 과제), 부처 간 참여과제(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12대 과제) 등 46개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근본문제 해결을 통한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은 부처별 활동에서 범정부적 연계강화를 이루어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 부처별로 이루어지던 감시단속을 범정부적으로 연계해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과거 제품 중심

의 관리에서 사람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여, 고의적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을 위해사범으로 지정해서 강력한 처벌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위해사범 처벌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법적기반 구축을 통해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량하한제를 고의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하고 불법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소매가격의 10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부당이익 환수



**불량식품
근절 종합 추진 체계**



제를 법령에 넣을 계획이다. 형량하한제(최저형량제)는 특정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는 제도로, 광우병,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식품에 사용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였으나, 올해부터는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 범죄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되어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 각 부처별 감시로 편향된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분산되어 관리되던 위해정보도 통합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식품 안전 행정은 식약처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안전정보는 여전히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어 위해정보 분석의 지연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례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식품 안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식품안전 정보망을 구축하여 식품위해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식약처가 주관이 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구성해 관계부처 정보 공유와 정보 시스템 연계 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며,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해서 위해소통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맞춤형 위해소통 기법 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해소통을 위한 위해소통센터도 함께 설립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변화와 함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활동 전개 방법도 달라진다. 식약처는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체계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협력체제로 전환해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시적 홍보, 계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안 사먹기 운동, 불량식품 안 만들기 운동 등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먹을거리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환경 조성

식약처는 국내 재배농산물의 10%를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일부 채소와 과일 등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사례가 있어서 농산물 안전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에 착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GAP 인증 농산물의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120개 농산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GAP 인증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지 농협이나 중앙회를 중심으로 GAP 인증 농산물 판매 확대와 대형 유통 판매업체가 판매를 전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가공식품 등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된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를 위해서 장류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에도 자율영양표시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량식품 OUT!
우리가 앞장서요!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 출범

먹을거리 불안요소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이 5월 12일 출범했다. 시민감시단은 정부주도의 식품안전 감시망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일반 시민 1,309명을 위촉했다. 시민감시단의 주요 역할은 범부처 기획 감시 참여,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 활동,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인터넷 흡소포장 지역사회 모니터링, 불량식품 근절 문화 확산 교육 및 홍보 등이다.